

# 국정 과제 관리 계획

2017. 7. 20.

국무조정실·법제처

# 목 차

<b>I .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점검·평가 방안(국조실) .....</b>	<b>1</b>
1. 국정과제 개요 .....	1
2. 국정과제 관리체계 .....	2
3. 국정과제 점검·평가계획 .....	3
4. 협조요청 사항 .....	4
<b>II .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방안(법제처) .....</b>	<b>5</b>
1. 보고배경 .....	5
2. 입법계획 세부 추진방안 .....	5
3. 협조요청 사항 .....	6
[붙임 1] 2017년도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117건) .....	7
[붙임 2] 하위법령 신속정비 대상 법령(154건) .....	15

# I. 국정과제 관리체계 및 점검·평가 방안

## 1 국정과제 개요

### □ 추진 경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17.5.22 설치)가 중심이 되어 201개 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국민제안 등을 기초로 100대 국정과제 선정(17.5~6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공식 발표  
(17.7.19.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 □ 국정과제 체계

- 국정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 설정,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
-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한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 국정과제 체계도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중장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2 국정과제 관리체계

◆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실(BH), 내각 차원에서는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국정과제 이행점검 및 보완·평가체제를 구축, 가동

### □ 정책기획위원회 및 정책실(BH)

#### ○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총괄

\* ▲ 일자리 ▲ 4차 산업혁명 ▲ 저출산·고령사회 ▲ 지방분권·균형발전

\*\* 국정목표를 고려하여 정치·행정·외교, 경제, 사회 등 4~5개 분과 구성

#### ○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정책실(BH)이 책임운영

### □ 국무조정실

#### ○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 종합점검 관리 및 조정, 평가

① 정기적 이행점검 및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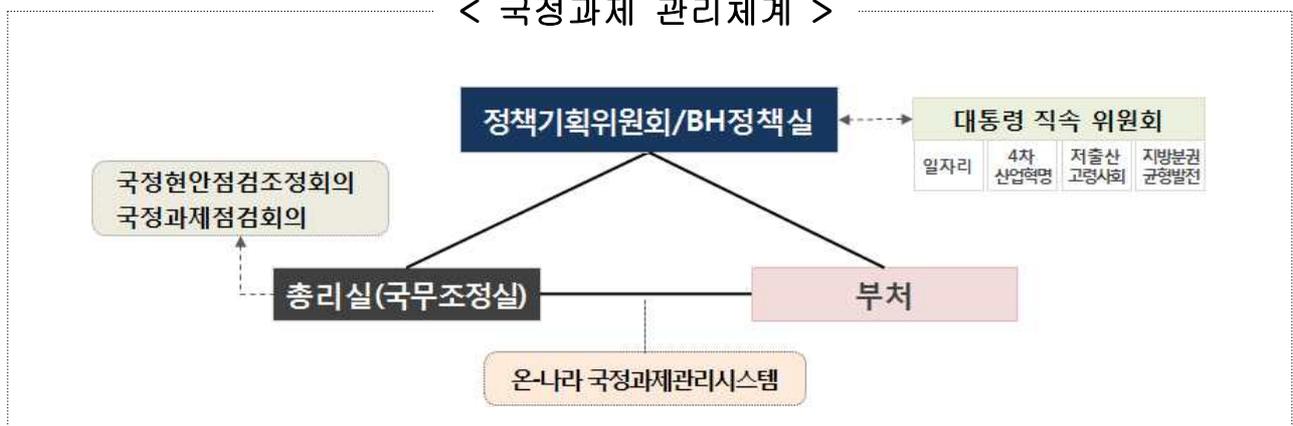
② 문제점,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국정과제점검회의(국조실장) 운영을 통해 해소 추진

③ 국정과제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부처 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 □ 각 부처

#### ○ 과제별 세부추진 로드맵 수립, 집행 및 과제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국정과제 관리체계 >



### 3 국정과제 점검·평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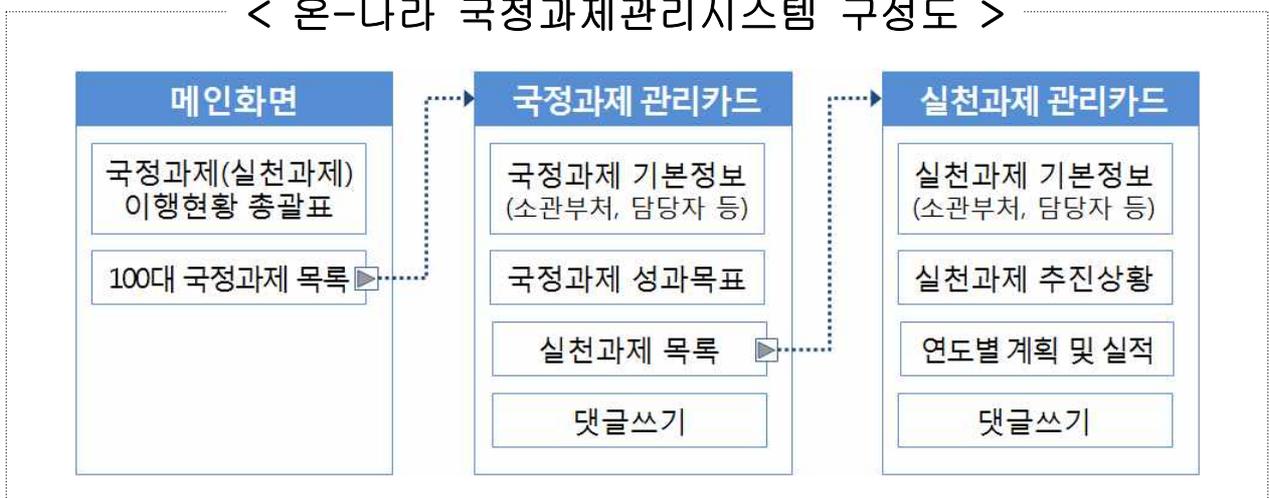
- ◆ (이행점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국조실 주관 현장점검 등 온-오프라인 점검 병행
- ◆ (결과평가) 연말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성과를 평가하고,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체감도 평가

#### 1. 이행상황 점검 : 온라인 점검 +현장점검

##### 1] 온라인 실시간 점검

-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
    - \* 기존 온-나라 시스템을 새로운 국정과제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편
  - 상기 과제관리시스템은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 실천과제별로 「관리카드」 구성
    - 과제 주요내용, 성과목표, 연도별 세부이행계획, 추진실적,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점검 효율화
    - 관리카드별로 '댓글쓰기' 기능을 통해 의견제시, 소통창구로 활용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과 연계, 추진상황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 각 부처, 소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카드 내용 시스템 등재 필요

#### <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구성도 >



## ② 현장 점검(정기/수시)

- 국조실 주관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 이행상황 확인 및 장애요인의 선제적 발굴·해소
  -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과제별 이행상황을 ▲이행완료 ▲정상추진 ▲보완필요 (▲사전대비 ▲장애발생)의 3~4단계로 구분  
→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구분	주기	주요내용
정기점검	매월	■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각 부처)
	분기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협업실태 등 점검
	반기	■ 주요 이행실적·성과 종합점검, 대국민 공개
	매년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수시점검		■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

⇒ 점검결과는 최대한 공개하고, 나타난 문제점,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 해결

## 2. 이행결과 평가

- (평가 개요) 100대 국정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과제 이행성과(50점)\* 및 국민만족도(10점) 조사 → 정부업무평가 반영
  - \* 일자리 창출 평가(20점) 별도
- (평가 방법)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을 중점 평가
  - 민간 평가지원단(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기관별 평가등급을 결정, 공개
-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결과를 점수화하여 반영

## 4 협조요청 사항

- ① 국정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7월말)
- ②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세부이행계획 등록(8월)
- ③ 각 부처, 이행실적 실시간 등록 및 매월 자체점검 실시

## II.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방안

### 1 보고배경

-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647건의 법령 제·개정 필요

<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 >

제·개정 필요 법령안	법 른						하 위 법 령					
	소 계	계 류 중	제 출 계 획	제 출 시 기			소 계	정 비 완 료 기 간				
				'17년	'18년	'19년 이후		'18.6월까지 정비 완료			'18.6월 이후	
				'17.9월	17.12월	18.6월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154	37	71	46	28

- 국정동력이 강한 새정부 초기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및 점검·관리체계 강화 필요

### 2 입법계획 세부 추진방안

####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수정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정과제 이행 법안 465건 중 국회 미제출 법안 342건은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법안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정) 국정과제 입법계획 중 금년도 국회 제출 필요 법안 117건(붙임 1)을 반영하고,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철회·수정이 필요한 법안을 제외하여 '정부입법 수정계획' 수립 (8월초 국무회의 보고 예정)

※ 새정부의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 등에 비추어, 이전 정부에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철회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병행

#### □ 국정성과의 조기 체감을 위한 하위법령 신속정비

- (하위법령 정비)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과제 중 154건(85%, 붙임 2)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3차('17.9월·12월, '18.6월)에 거쳐 정비 완료

\* 사전입안지원, 사전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등

## □ 국정과제 법안 특별관리 및 이행점검

- (특별관리) 국회 매 임시회·정기회 별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점법안 선정,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
  - 입안 지원, 부처 이견 신속 조정(법제처, 국조실)
  - 특히,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경우 쟁점 신속 파악 및 통일된 정부 견해 제시 등으로 국회심의 대응 강화
- (복합·혁신과제 관리) 국정과제 법안 중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법안에 대해서는 전담 법제관을 지정
  - '사전입안지원-사전심사-법제심사'를 연계,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
- (입법성과 관리)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현안조정회의, 당정협의회 및 차관·국무회의에 수시 보고
  - 부처 간, 이해집단 간 갈등의 조기 파악 및 해소로 원활한 입법추진 도모

## 3 협조요청 사항

- (추진일정 준수)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법안 제출, 하위법령 정비 등이 국정과제 입법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협조
  - \* 관련 부처(재정부담-기재부, 조직 신설·변경-행자부 등)와의 적극적 협의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의 선제적 쟁점관리 필요
- (국회심의 대응) 법안의 국회제출 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설득 노력 강화
-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한 소통 강화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적극 반영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회
- (입법실적 평가) 국정과제 평가 시 각 부처의 입법활동\* 반영
  - \* 법안 국회 제출, 하위법령 정비 완료 등 노력에 따라 성과평가가 가능한 항목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 제출	국정과제
<input type="checkbox"/> 감사원(1건)				
1	감사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li> <li>수시보고 명칭 변경 및 대외 공개</li> <li>회계담당자가 회계집행의 의문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경우 반드시 해석·답변</li> </ul>	9월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input type="checkbox"/> 선거관리위원회(3건)				
2	공직선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의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li> <li>투표시간을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연장</li> <li>완전국민경선제 도입</li> <li>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에게 피선거권 확대</li> <li>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li> <li>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강화</li> <li>예비후보자제도 상시운영, 사이버선거운동 확대 등 선거운동 방법 확대</li> <li>선거공영제 강화</li> <li>재·보궐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해당 선거 후보 무공천 제도화</li> </ul>	12월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3	정치자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공영제 강화</li> <li>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등</li> <li>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도록 정당 후원회 제도 정비, 정당의 특별당비 내역 공개</li> <li>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지원 강화</li> </ul>	12월	
4	정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연령가입제한 폐지, 시·군·구당 설치 허용</li> </ul>	12월	
<input type="checkbox"/> 국무조정실(1건)				
5	행정규제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신문고·규제차등화 근거 조문 마련</li> <li>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과태료·과징금 등 규제심사 제외 대상 추가</li> </ul>	12월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6건)				
6	(가칭) 사회적경제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대안 마련</li> </ul>	8월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7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체납 면제 등</li> <li>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중도해지 사유 확대 등 추진</li> </ul>	9월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8	국세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li> </ul>	9월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9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강화 등</li> </ul>	9월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li> </ul>	9월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li> <li>공공기관 감사의 결격사유 구체화 및 공기업 감사 임기 확대</li> <li>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li> </ul>	12월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 제출	국정과제
□ 교육부(5건)				
12	교육공무원법	• 기간제 교원에 게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권보호 규정 적용	10월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13	(가칭) 교육시설 기본법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12월	
14	고등교육법	• 정부 대입정책 발표시기 법제화 • 대학입학사정관 등의 회피·제척 근거 마련	12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5	학교체육 진흥법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 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12월	
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현장실습계약서 내용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추가	12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미래창조과학부(6건)				
17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 정책자문·조정기구 통합 및 기능 이관	9월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과학기술 정책자문·조정기구 통합 및 기능 이관	9월	
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ICT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등	9월	33.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0	국가정보화 기본법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본방향, 기술혁신 촉진, 산업의 지능화, 사회정책 개편 등을 법제화	12월	
2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등	12월	
22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 •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12월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외교부(1건)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가개발전략회의 근거규정 신설 및 무상원조 통합추진체계 강화 근거 마련	12월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법무부(1건)				
24	(가칭) 통합구조조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무부, 금융위, 증기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제도로 나뉘어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경제주체의 구조조정 및 재기를 위한 통합구조조정 관리체계 구축	12월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국방부(4건)				
25	방위사업법	• 무기체계 소요가 없는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혁신, 도약적 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월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26	(가칭) 군인재해보상법	•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 현실화 • 공무상요양비 지급 확대, 순직유족 연금/사망보상금 지급률 상향 등	11월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27	군인연금법	• 사망/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급여를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전	11월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 제출	국정과제
28	(가칭) 5·18 계엄군의 민간인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법	• 5·18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최초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진상규명	12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행정자치부(6건)				
29	(가칭)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영상정보 수집 사실 표시 등	8월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30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몰도래 감면 연장여부 검토 등	9월	
31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등	9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2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 조정, 제도개선 등	12월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과거사 통합 재단 설립 의무, 설립시기 등	12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34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 통합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정보화 투자효율화 추진	12월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경찰청(1건)				
35	(가칭) 자치경찰법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이 명기된 관련 법률 마련	12월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2건)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예술강사 지원 법적근거, 활동 연한 등 명시	11월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37	관광진흥법	• 관광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근거 신설	12월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4건)				
3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11월	
39	축산법	• AI, 구제역 반복 발생 농가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12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육제한 명령제 도입, 일시이동 제한명령 권한 확대 등	12월	
41	(가칭)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장기 농정방향 수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12월	
□ 산업통상자원부(5건)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원체계 개편 등 균형발전 거버넌스 관련 법률 정비 •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8월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관리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근거 마련 등	9월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4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구조조정 과정에서 광물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출자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9월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풍력발전지구 지정근거 마련 • 지역 신재생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12월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제출	국정과제
46	유통산업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복합쇼핑몰 추가 등으로 확대</li> <li>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 신설</li> <li>* 국회에 기제출되어 있는 2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li> </ul>	12월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소기업청(8건)				
47	(가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권한, 대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이행력 확보 수단 등</li> <li>* 기존 발의법안 대안입법</li> </ul>	9월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합업종 사업조정 최초권고기간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li> <li>동반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신설</li> </ul>	9월	
4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신용보증재단을 재보증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재단에 갖는 '보전채권' 정의 및 보전채권 매각근거 마련</li> </ul>	9월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확인 요건 및 절차 개편</li> </ul>	9월	
5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li> </ul>	10월	
5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권고·명령 등 행정구제 근거 마련</li> </ul>	12월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전담 공공연 지정,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지원 근거 마련</li> </ul>	12월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공유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범위 정의</li> </ul>	12월	41.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보건복지부(10건)				
55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li> </ul>	9월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
56	국민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포함</li> <li>-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li> <li>과징금 사용 용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가</li> <li>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동일 사업장 1년 미만자 가입 관련)</li> </ul>	9월	
57	(가칭) 아동수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지급 결정절차, 정보수집 근거 등</li> </ul>	10월	
58	기초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li> <li>*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li> <li>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li> </ul>	10월	
59	국민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li> <li>사무국설치</li> <li>기금운용본부 확대 개편</li> </ul>	12월	
60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의료보험의 상호 영향, 반사이익, 손해율 등 주기적 실태조사, 손해율·보험료를 적정성 검증</li> <li>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정보 공유</li> <li>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시 복지부 협의 의무화</li> <li>복지부에 민간의료 보험 개선권고 권한</li> <li>정책협의체, 실태조사 협의체, 비급여 협의체, 보험상품협의체 관련 근거 마련</li> <li>금융위·복지부 공동관리 및 감독 권한 부여</li> </ul>	12월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고령사회전담기구 신설</li> </ul>	12월	
62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li> </ul>	12월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제출	국정과제
63	의료법	• 의료법인 등의 임원결격사유,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 신설	12월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64	(가칭) 사회서비스 발전기본법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원 설치·운영, 범정부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물적·인적자원 통합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등 근거 마련	12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환경부(9건)				
65	(가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제 도입	7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6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조·수입량 1톤/년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 및 등록 의무화	7월	
67	(가칭)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배출 정보체계 구축, 고농도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보호	7월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68	(가칭)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충청·동남·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7월	
69	대기환경보전법	• 경유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도입	10월	
70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및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	10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7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돌봄센터 운영근거 마련	12월	
72	(가칭)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물산업 육성 등	12월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73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지속가능 관련 법령 및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의	12월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6건)				
74	고용정책 기본법	• 법률 제·개정시 사전고용 영향평가 실시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강화 •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권한 및 개인정보의 보호, 고용정보의 제공요청, 고용관련 정보의 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	12월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75	근로기준법 1	• 상습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확대 추진	8월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76	고용보험법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9월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77	(가칭)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방식 도입 등을 통한 시장 공식화	10월	
78	근로기준법 2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재직자 적용, 체불임금 부가금제도 도입, 상습체불 사업주 반의사불벌 제외 등	12월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79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지급보장기구 신설,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도덕적 해이 방지	12월	
□ 여성가족부(1건)				
8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부처 통보근거 마련 • 심층평가전문연구기관 대행근거 마련 등	12월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제출	국정과제
□ 국토교통부(8건)				
81	공공주택 특별법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시 철도 등 공공시설 부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특례(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제한 특례 등)를 공용재산 부지까지 확대 적용	7월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한하여 택지 지원 •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공 기여 • 역세권형 촉진지구 신설 • 공공에 한하여 GB 해제 허용 •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 기준	8월	
83	유료도로법	•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실행력 확보 등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민자 관리·감독기구 체계 구축	8월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8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 • 혁신도시별 민관합동지원단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거점화 사업, 정주여건 조성 등을 지원	9월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청 설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광역버스 노선 신설·조정 등	12월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86	해외건설 촉진법	• 지원기구 설립 및 해외건설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의 법령근거 마련	12월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87	철도안전법	• 차량개조 승인제 신설	12월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의 범위 확대(농어촌→도시)	12월	
□ 해양수산부(9건)				
89	(가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 갯벌복원 사업 제도화 • 갯벌생태공원 지정제도 도입 • 갯벌생태 관광 인증 등	7월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90	(가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이행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 도입	7월	
91	(가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공사 업무, 이사회, 자본금 등 설립 세부사항	8월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92	(가칭)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안보선대 구성 및 필수항만 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12월	
9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국세감면 근거 마련	12월	
9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12월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제출	국정과제
95	해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li> <li>• 연안여객선 지원 근거 마련</li> <li>• 선박개조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li> <li>•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에 친환경선박 개조 시 재정지원근거 추가</li> </ul>	12월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96	(가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주체, 평가방법 재정립</li> <li>• 해양공간 관련 이용·개발에 대한 실효적 사전예방 관리수단 확보</li> <li>• 사전해양환경조사 실시</li> </ul>	12월	
97	(가칭)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배출의 원칙적 금지,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관리책임 강화</li> <li>•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처리방법 고도화</li> <li>•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li> </ul>	12월	
□ 국민안전처(4건)				
98	(가칭)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인 재난원인 조사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 신설</li> </ul>	7월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99	(가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li> </ul>	12월	
100	재해구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li> </ul>	12월	
10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li> <li>• 기본계획의 내용·범위 제시</li> <li>• 기본계획의 확정을 위한 심의규정 마련</li> </ul>	12월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국가보훈처(2건)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 마련</li> </ul>	12월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03	(가칭)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li> </ul>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처(7건)				
104	(가칭) 첨단바이오의약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 채취부터 시판후 조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신속심사, 조건부 허가 등 첨단 융·복합 제품 맞춤형 규제 도입</li> </ul>	7월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05	(가칭)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의 통합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적용제품 및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인체 (통합)위해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li> </ul>	7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1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검사 역류제도 도입</li> </ul>	9월	
107	식품안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소송제 도입</li> </ul>	9월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08	(가칭)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허가지원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심사 등 첨단융복합 제품 맞춤형 규제 도입</li> </ul>	11월	
10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이득환수제, 형량하한제 확대 적용</li> </ul>	12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110	(가칭)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등</li> </ul>	12월	

소관 부처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국회 제출	국정과제
□ 공정거래위원회(2건)				
1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li> <li>•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li> </ul>	8월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li> </ul>	8월	
□ 금융위원회(2건)				
1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금융권 최대주주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내실화</li> </ul>	12월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외에 과징금제재를 신설·병과</li> <l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시효를 현행 3년 → 5년으로 확대</li> </ul>	12월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국민권익위원회(1건)				
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등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li> <li>•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의무 대상자 확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li> </ul>	12월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국가인권위원회(1건)				
116	국가인권위원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원 총원구조, 군인권보호관 설치근거 마련 등</li> </ul>	12월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1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 소속 조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상 강화</li> </ul>	12월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붙임 2

## 하위법령 신속정비 대상 법령(154건)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 국무조정실(3건)					
1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17. 9.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담부서 조정	'17. 9.	
3	행정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민간위원 윤리규정 도입 등	'17. 9.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기획재정부(8건)					
4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17. 12.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등	'17. 12.	
6		관세법 시행령	•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과세정보 추가확보 등	'17. 12.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공동사업 제품 조합 추천제도 근거 마련	'17. 12.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8	행정규칙	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성과연봉제 권고안 미이행시의 패널티 규정 미적용과 관련한 규정 개정	'17. 9. (17. 6. 개정 완료)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9		17년도 경영평가편람	• 비정규직 및 일자리 관련 평가항목 개선(평가지표를 별도 항목화하고 배점을 강화)	'17. 9.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 계약에 있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17. 12.	
1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17. 12.	
□ 교육부(12건)					
12	대통령령	(가칭)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교육회의 설치	'17. 9.	76.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	•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정 • 학교 밖 학생 학습 지원 및 학력 인정 근거 마련	'17. 9.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 고교 선발시기 변경 • 고교 체제 개편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 안전에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확대	'17. 12.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76.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15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학점제 및 무학년제 도입	'17. 12.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16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정상화시 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 제한 등	'17. 12.	76.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17	부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 학부모 안심교육평가제 운영	'18. 6.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8		교육공무원임용령	• 유능한 교사의 교장공모 임용 확대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18. 6.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시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 검토	'18. 6.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 성인 평생교육 여건개선	'18. 6.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21		대학설립·운영규정	• 성인 평생교육 여건개선	'18. 6.	
2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문해교육 시설 설비기준 완화	'17. 12.	평생·직업교육 혁신
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관리 기준 마련	'17. 12.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b>□ 미래창조과학부(4건)</b>					
24	대통령령	(가칭)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혁신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구심점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17. 9.	33.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5		방송법 시행령	• 유료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 •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확대	'17. 9.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정요건 현실화 - 특구권역의 혁신주체 중심의 단일, 소형화 - 주관부처의 첨단기술분야 설정 및 특구특화분야와의 연계 강화 •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의 한 방안으로서,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17. 12.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공개 의무 부과	'18. 6.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b>□ 외교부(1건)</b>					
28	대통령령	(가칭)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원회 설치·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	'17. 12.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b>□ 국방부(3건)</b>					
29	대통령령	(가칭) 동원전력사령부령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근거 - 설치, 임무, 사령관 임명, 직무부대의 설치, 정원 등	'17. 9.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남군 육아시간 허용 • 자녀돌봄휴가 신설	'17. 9.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31		병역법 시행령	• 고소득자의 기준 및 병적관리, 자료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	'17. 9.	
<b>□ 행정자치부(4건)</b>					
32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기구 수 설치기준이 되는 인구 구간 세분화	'17. 9.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3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변경	'17. 12.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3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수의허가 허용 및 사용료 감면	'18. 6.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35	행정규칙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중 상향	'17. 12.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2건)					
36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 시장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도내에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창작자의 효과적인 권리 보호 도모	'17. 12.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37	행정규칙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호텔등급평가시 장애인이용시설 배점강화	'17. 12.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4건)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산지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	'17. 9.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39	대통령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정의, 사업 승인 절차, 시설 규모 등 관련 내용 신설	'17. 9.	81.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4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농지연금 신규상품인 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의 시행 근거 마련	'17. 12.	
41		종자산업법 시행령	• 육묘산업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17. 12.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산림청(1건)					
42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18. 6.	81.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10건)					
4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관련 : 지정 절차,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	'17. 9. (17. 6. 개정 완료)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상점가 기준을 2000㎡에 50개 이상 점포 →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 * 국회에 기제출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원발의)과 함께 논의	'17. 12.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45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17. 12.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4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기준 완화	'17. 12.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	'18. 6.	
4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융합신제품 관련 표준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8. 6.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4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 변경	'18. 6.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50	행정 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현행 50%에서 10~30%로 조정)	'17. 12.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51		에너지관리기준	• 신규설비에 대한 부문 추가 및 향상된 기술수준 반영을 위한 부문별 개편	'18. 6.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5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증 희귀질환자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18. 6.		
□ 중소기업청(3건)						
53	대통 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완화(현행 50억 원)	'17. 9.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5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 확대	'17. 12.		
55	행정 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건물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17. 9.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20건)						
56	대통 령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17. 12.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	
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 임의계속가입 기간 연장(2년->3년) •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5% 규정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17. 12.		
58		의료급여법 시행령 1	•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면제 규정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17. 12.		
59		국민연금법 시행령	• 단시간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관련 "1개월 이상 기준" 삭제 등 • 최초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시에도 출산육아휴직자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18. 6.		
6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변경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상한한 금액 등 •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18. 6.		
6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변경	'18. 6.		
62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안전교육 기준 개정	'18. 6.		
63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17. 12.		
64		부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활동지원 추가급여의 종류		'18. 6.
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제 기준확대 선별급여 절차 및 직권조정 규정 정비	'18. 6.		
66	의료법 시행규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별 인력 기준 조정 등	'18. 6.			
67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접종 대상에 초중고생 포함	'17. 9.			
68	행정 규칙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치매 추가	'17. 12.		
6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 치매 진단검사 급여화 관련 급여 전환 항목의 등재, 상대가치점수 규정	'17. 12.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7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본인부담률 구간 정비 및 결정기준 개정	'17. 12.	
7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 예비급여 적용 관련 급여 전환 항목의 기준 고시, 기 등재 항목의 기준 확대 등 규정	'17. 12.	
7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선별급여 및 보장성 강화 약제의 대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17. 12.	
73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소득기준 상향	'18. 6.	
7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 치매 진단검사 급여화 관련 급여 기준 규정	'18. 6.	
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 예비급여 적용 관련 급여 전환 항목의 등재, 상대가치점수 규정	'18. 6.	

□ 환경부(9건)

7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잔혹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규제	'17. 12.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77	대통령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순환자원 인정절차, 소각매립 부담금 산정 등	'17. 12.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
78		환경보건법 시행령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의 대상인 어린이활동공간 확대(학원, 키즈카페 등)	'18. 6.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79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 $\mu\text{g}/\text{m}^3$ )	'18. 6.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8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18. 6.	
81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	'17. 12.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8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추가	'18. 6.	
8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방법 등	'18. 6.	
84	행정규칙	(가칭) 4대강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운영 규정	• 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12.	

□ 기상청(1건)

85	대통령령	기상법 시행령	• 재난 대비 기상 예·특보에 관한 사항 • 관공선의 해양기상 관측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18. 6.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	---------	---	---------	--

□ 고용노동부(14건)

86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17. 12.	19. 실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87		고용보험법 시행령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60%→80%)	'17. 12.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 AA제도개선(AA적용대상 사업장에 지방공기업 추가)	'17. 12.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 남녀고용평등법 쉼 사업장 적용	'18. 6.	
9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7. 9.	
91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AA 시행계획 제출시 성별 임금격차 및 신규채용 남녀불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 제출의무 부과	'17. 12.	
9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1	• 고용형태공시 사업장별 실시 및 소속외 근로자 주요 업무내용 공시	'17. 12.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9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	•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시	'18. 6.	
9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	'18. 6.		
95	행정 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중소기업 현장학습 및 신기술·고급훈련 우대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17. 12.	19. 실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9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 지원규정	• 중소기업 신기술·고급훈련 우대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17. 12.	
9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 중소기업 신기술·고급훈련 우대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17. 12.	
98		(가칭) 자영업자 특화 계좌 운영규정	•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특화 계좌 신설 및 운영	'17. 12.	
9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경증감액 및 6급 한시지원 제도 폐지 등	'17. 12.	

□ 국토교통부(26건)

100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스마트도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적용대상 및 사업 확대 등	'17. 9.	33. 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10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에 홀몸노인안심센터 추가	'17. 9.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10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개선	'17. 9.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103		유료도로법 시행령 1	• 명절기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조문 신설	'17. 9.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04		철도안전법 시행령	• 관제사 자격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17. 9.	
105		유료도로법 시행령 2	• 특정기간(올림픽기간 등)에 대한 무료화 조문 신설	'17. 12.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06		도로법 시행령	•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감면,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 등	'17. 12.	
107		주거기본법 시행령	•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구체화	'17. 12.	
1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세부 절차 등	'17. 12.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109		건축법 시행령 1	•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7. 12.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110	부령	건축법 시행령 2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 조성	'18. 6.	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 심사 낙찰제 도입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마련	'18. 6.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112		유료도로법 시행령 3	• 화물차 할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18. 6.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 저소득 고령자 영구임대 1순위 입주 자격 부여 • 주거약자용 주택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 개정	'17. 9.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1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7. 9.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시내버스 운행제한 규정을 완화 • 군 지역에 대한 승합택시 도입	'17. 12.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16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실수요검증 기준의 물류단지 연계교통망 평가항목 반영	'17. 12.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17		(가칭)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혼용차로의 설치 및 노면전차의 건설, 운전 등	'17. 12.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초소형 전기차 및 대형 수소차 안전기준 보완 등	'18. 6.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	• 대기자 명부 제도 근거 마련	'18. 6.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12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저소득 고령자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 부여 • 매입임대, 전세임대 자녀수 가점 확대 •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 마련	'17. 9.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121		행정규칙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취약계층 우선 입주기준 적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자녀수 가점 확대	'17. 9.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12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7. 9.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123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수 가점 확대	'17. 9.		
124	(가칭) 친환경 택시 구분기준	• 일반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의 차종을 확대(1종 → 4종 이상)	'17. 12.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12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신축 주택(평균전용면적 60㎡ 이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강화 (현행 30% → '17년 50% → '18년 60%)	'18. 6.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해양수산부(3건)						
126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 어업면허금지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17. 12.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127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음식점 수산물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추가(초밥용 수산물)	'18. 6.		
128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해교란해양생물 추가지정	'17. 12.		
□ 국민안전처(3건)						
129	대통령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	'17. 9.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1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대상 확대	'17. 12.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131	행정규칙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재난문자 발송권한 시·도 이양 등	'17. 9.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인사혁신처(11건)						
132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	'17. 9.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33		인사 감사 규정	•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받고도 시정·개선 등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소극적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기관장의 인사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17. 12.		
134		공무원임용령	• 금품·향응수수 등에 따른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가산기간 강화 • 균형인사 관련 내용 신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	'17. 12.		
135		(가칭) 장관 윤리강령	• 장관의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과 기준을 제도화	'17. 12.		
1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권장 연가일수 확대, 남성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육아시간 확대 등	'17. 12.		
137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18. 6.		
138		공무원임용시험령	• 시험과목·선발방식 근거 마련	'18. 6.		
139		공무원보수규정	• 부처별 성과급 등급수 및 지급액 등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8. 6.		
14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직무, 조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제도 설계 등을 위한 제도개선	'18. 6.		
14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확대	'18. 6.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142		행정규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중 상향		'17. 12.

소관 부처					
연번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정비완료	국정과제
□ 식품의약품안전처(4건)					
143	대통령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계 행정기관 범위 확대 등	'18. 6.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144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식육가공업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 확대 •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7. 12.	
1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가정간편식, 편의점 도시락 영양표시 확대)	'17. 12.	
14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	• 식품이력 의무등록 대상 확대	'18. 6.	
□ 방송통신위원회(1건)					
147	행정규칙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시각장애인의 효과적인 재난상황 인지를 위한 재난방송 경보음 기준 마련	'17. 12.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공정거래위원회(4건)					
148	대통령령	(가칭) 을지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갑을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등	'17. 9.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17. 12.	
1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필수물품 가격공개	'17. 12.	
1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료제출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방법 등 구체화	'17. 12.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금융위원회(2건)					
152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	'17. 9.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5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17. 9.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1건)					
154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도입 •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 규정 도입	'17. 12.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